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에도 김병기 ‘재심’ 신청하며 버티기

金, 의혹 대부분 징계시효 만료 주장
민주당, 60일 이내 심사·의결해야
스스로 결단 요청하는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한 금수수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김 의원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12일) 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의 서울시의원 공천금 수수,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금 수수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에 대한 김 의원의 소명을 듣고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으로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자신을 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려싼 의혹 대부분이 3년의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한 김병기 의원은 제명

처분 소식 접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해야 한다. 윤리심판원에 제명 처분에도 김 의원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당 지도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당초 지도부는 김 의원이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고 14일 최고 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를 통해 김 의원 건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심이 이뤄져 사태가 장기화되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재심 청구 역시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며 “당 사자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며, 정치의 책임과 도덕성”이라고 부연했다.

윤리심판원의 재심 심사 및 의결 기간인 60일 보다 훨씬 빠르게 재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당 대표는 재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비상장계를 내릴 수 있지만, 원내에선 윤리심판원에서 이미 제명 처분이 나왔고 당규에 재심 절차를 보장한 만큼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상장계 절차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심도) 당에서 정한 절차이기에 우리가 지켜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김 의원의) 사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개인에게 보장된 재심 청구 같은 것은 권리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된 조짐을 보이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꽃이 진다고 봄이 끝난 것은 아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한 김 의원을 지적한 것이란 평이 나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준석-장동혁 “통일교·공천 특검, 항소 포기 규명” 공감대

조국 대표 불참식에 아쉬움 전해
국힘 “수사 미진하면 특검법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만나 정부·여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하자며 머리를 맞댔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김병기·강선우 의원 낙취록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공천금 수수, 민주당·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대장동 검찰 항소포기 경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두 정당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만남은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러브콜을 보내는 와중에 이 대표가 장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3당 회동을 제안한 뒤 성사된 자리다.

조국 대표는 회동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참석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협력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두 정당의 만남의 물꼬가 트임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보수 정당

의 연대가 성사될 지도 관전포인트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자리가 성사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당”이라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선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5579억원을 환수하려 계좌를 압류했다.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 대우 계좌에 7만원, 천하동인에 3만원이 있었다”며 “미리 다 빼돌린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다. 수사팀 전원이 항소하자고 했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을 받았다고 한다.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낙취록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을 13개에 가깝다. 녹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금·통일교 특검 연대’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있고 탄원서가 있고 돈이 오갔다. 그런데 탄원서가 어떻게 됐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갔다가 피탄원인 김 의원에게 그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통일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전직직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여권 의혹을 인지하

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기들 유리한 특검은 단독 통과, 불리한 특검은 보류, 신천지를 끼워 넣어서 몰타기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기고 수용하는 착하는 시간 끌기”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국 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 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다”며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을 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우리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윤리심판원에서 제명한 사안이고,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라며 “양당 대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미진한 경우 양당은 함께 공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與 “2차 종합특검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로 대응”

내일 국회 본회의 예정

국회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진희·해병대원)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 법사위가 어제 내란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갖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

에 기가 찰 따름이다. 철저히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 파괴, 정치 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률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견례를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